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10월

## 전문가 기고

ESG 공시의무화, 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 주요 이슈

K-Taxonomy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ESG 동향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주요 통계



매일경제  
정승환 기자

# ESG 공시의무화, 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경제계가 정부에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충분히 유예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금융위에서 2016년 이후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조정했지만 기업에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 ESG 공시기준서를 발표했다. ISSB 기준은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사용되는 IFRS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는 ISSB 기준을 반영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재계는 ESG 공시 일정 관련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발 ESG 규범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도 환경·노동인권 준법 경영 등 ESG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조차 협력사가 발생시킨 탄소 등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모든 탄소 배출을 의미하는 스코프(Scope)3, 제3자 검증 등 ESG 문제에 대응하기 벅거운 실정이다. 공시가 의무화 되면, 이미 자율공시를 하는 기업들도 검증 비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소한 탄소배출 감·인증 시장과 열악한 재생에너지 여건 등도 기업들이 ESG 공시를 쉽게할 수 없는 이유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ISSB의 ESG 기준을 적용한 로드맵을 제시한 국가는 거의 없다.

일본의 도입 일정은 미정이다. 가와니시 야스노부 일본회계기준 제정기구 위원장은 지난 8월 회계기준원이 주최한 국제 지속가능경영 공시 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은 IFRS 도입 시 발생한 혼란을 교훈 삼아 이해관계자 협의와 함께 타 국가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2025년 3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재계와 공화당 반발 등으로 ESG 공시규칙 최종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로드맵을 포함한 공시 규칙을 지난해 말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로 1차 연기한 뒤 10월로 재차 연기했다. 올해 10월 발표되더라도 2025년 이전 ESG 공시 의무화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 19명은 지난해 4월 기후 공시 의무화 같은 규제는 불합리하며 기후 관련 규제는 SEC의 업무 권한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지난 7월말 ESG 공시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승인했다. 하지만 공시 로드맵을 확정된 EU 회원국은 아직 없다.

한국ESG연구소 관계자는 "ESG공시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일본과 미국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속고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추진이 가능하려면 연성규범의 형태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유관기관 및 기업간의 적극적 소통으로 기업의 자율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 K-Taxonomy

##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지속가능경영원

### 1. Green Taxonomy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한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어떤 경제활동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그린워싱 판단 기준)으로 주요 기후, 사회, 녹색 또는 지속가능한 목표를 충족하는 활동 또는 자산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산업,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 EU Tax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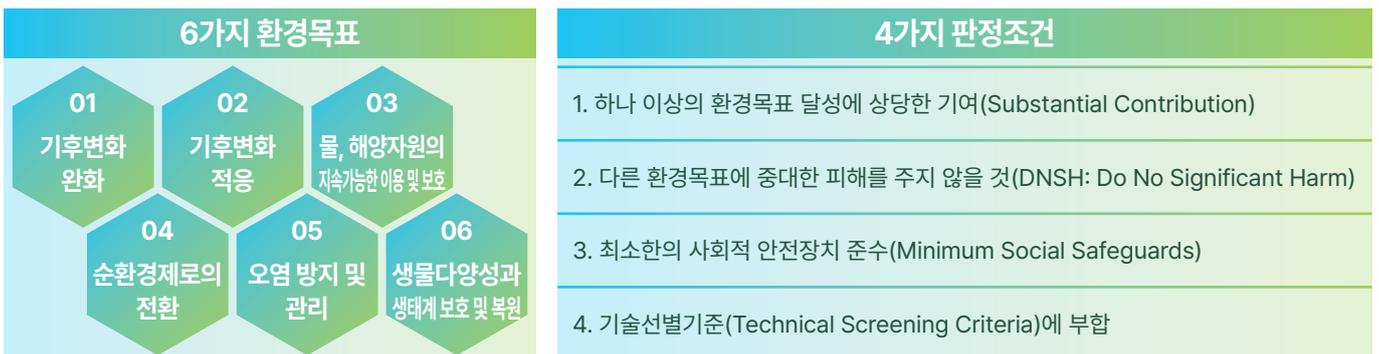
EU 택소노미는 EU의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하고 같은 해 EU 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 TR)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6가지 환경목표와 4가지 판정조건을 제시함으로써 EU 택소노미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 판정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CSRD('23년 재무년도에 대해 '24.1월부터 적용)에 의해 재무적 지표 외에 비재무적인 요인 즉 ESG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므로 EU 택소노미는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K-Taxonomy 배경 및 필요성

2021년 1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과 적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이 본격 개시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C 이내, 가급적 1.5°C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 함께 전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 순배출제로(Net-zero)의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여러 국가가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대변되는 과잉, 허위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 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EU 등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발되었다.

### EU 택소노미의 환경목표 및 판정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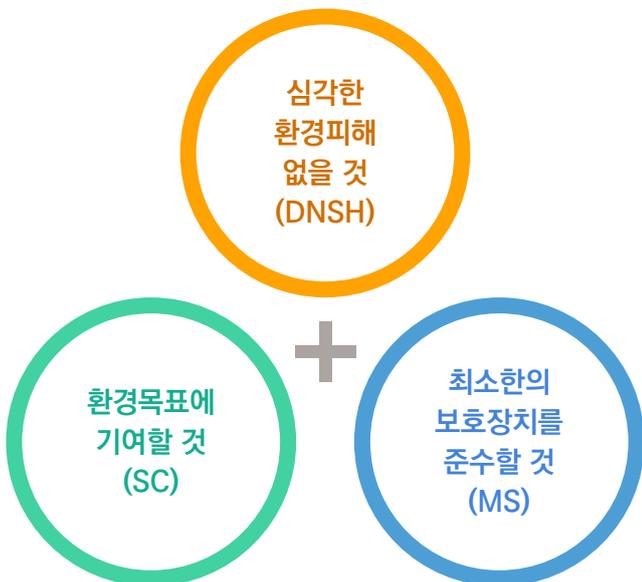
## 4. K-Taxonomy 개념 및 주요내용

### 가. 개념 및 원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념,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개념 :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자발적 지침서
- (2) 원칙 :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SC; Substantial contribution)
  -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EU 택소노미의 환경목표 및 판정조건



### 나.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총 67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품목 제조, 연구·개발·실증 등 3개의 공통 경제활동이 신설되었다.

또한 제조 및 서비스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녹색부문'에 포함하였다. '녹색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중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7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화석연료를 일부 포함하지만,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므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블루수소 제조 등 기포함된 경제활동이라 할지라도 기술개발 동향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포함된 경제활동에 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 5. K-Taxonomy 적합성판단 절차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a) 온실가스 감축, b) 기후변화 적응, c)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d) 순환경제로의 전환, e) 오염 방지 및 관리, f) 생물다양성 보전
-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제활동과 관련된 국내 법령, 고시, 지침, 기준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준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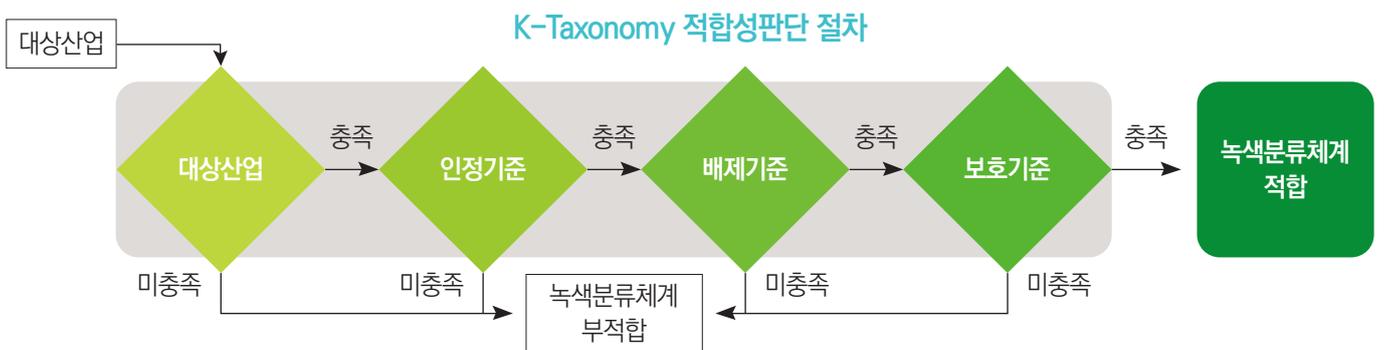
## 6. 적합성판단 사후관리

기업과 금융기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적합성판단 기준을 이미 충족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적합성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경제활동 수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 환경 개선 관련 지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측정·

기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투자 또는 여신 등을 제공한 프로젝트나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모니터링 결과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 중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7. 향후 과제

EU Taxonomy의 경우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포함하는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따라서 K-Taxonomy도 국내 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다양한 업종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녹색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경제활동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다 명확화 하고, 아직까지 명시화 되지 않은 인정기준이나 배제기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녹색위장행위 (그린워싱)를 예방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녹색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K-Taxonomy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금여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녹색경제활동 관련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자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21223)\_환경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221223)\_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 (에너지 지식정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및 녹색분류체계 연구 - 임형우 한국환경연구원
- U의 기후환경변화 대응 위한 Taxonomy 관련 규정 제정 및 주요 내용\_금융감독원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조사연구자료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최근 ESG 공시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당초 2025년이었던 ESG 의무공시 시작을 2026년 이후부터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EU, 미국 등 선진국의 ESG 공시제도 동향을 감안하여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탄소관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당국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 해외 ESG 뉴스

### COP28 벌써부터 ‘신경전’ ... EU,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합의 추진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1>  
ESG경제 | 2023.09.04.

### EU 공급망 실사 입법 동향... 어디까지 왔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5836](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5836)  
KOTRA해외시장뉴스 | 2023.09.11.

### 유럽연합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2.5% 늘린다, IRA 맞설 그린딜 강화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7205](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7205)  
비즈니스포스트 | 2023.09.13.

### EU,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 앞두고 수출품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9670\\_36133.html](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29670_36133.html)  
MBC | 2023.10.01.

### EU ‘탄소 국경세’ 시행 이어 美 의회도 초당적 입법 추진..한국 철강업계 등 ‘비상’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2023091804543725936b49b9d1da\\_1/article.html](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2023091804543725936b49b9d1da_1/article.html)  
글로벌이코노믹 | 2023.09.18.

## 국내 ESG 뉴스

### 금융위, “ESG공시, 2026년 이후 도입”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71>  
데일리임팩트 | 2023.10.16.

### 국내 30대 그룹 여성임원 비중 6.9%... 5년새 2배 이상으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8125800003?input=1195m>  
연합뉴스 | 2023.09.19.

### 韓이 쏘아올린 ‘CFE’... 기업 부담 덜고 탄소중립·원전 세일즈 밀거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2110183178114>  
머니투데이 | 2023.09.21.

### 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본격 시행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0309540821681>  
아시아경제 | 2023.10.03.

### 환경부, ‘탄소국경세’ 대응 위해 대면 도움창구 운영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004010000560>  
아시아투데이 | 2023.10.04.

# ESG 통계 지표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개)

	'23.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녹색채권	215	221	227	231	249	247	249	257
사회적채권	1,103	1,138	1,164	1,201	1,246	1,281	1,314	1,371
지속가능채권	300	299	297	290	297	292	287	294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 천억 원)

	'23.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녹색채권	205	210	215	217	243	241	241	249
사회적채권	1,576	1,638	1,666	1,713	1,768	1,803	1,849	1,898
지속가능채권	213	212	211	214	217	216	209	212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23.9.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52

###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23.9.30)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3.10.) \*CF100 참여 기업(기관) 수: 138개 ('23.10.)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	-	-	6	14	27	34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0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2월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3월 |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4월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5월 |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6월 |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7월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정책

8월 | 지속가능 정보공시의무화와 제3자 인증의 신뢰성

9월 | TCFD 개요 및 적용 현황

10월 | K-Taxonomy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1월 | ESG기업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12월 | 생물다양성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4 | E. whk@korcham.net